

“국수본에 이재명 등 체포 대상 불러줘”

방첩사 과장 “누구 체포하나 물어 ‘이재명·한동훈’ 답변”

“정치인 체포 지시, 불합리·불법적이라 생각”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 과장이 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인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란 대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

장)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구 과장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과 관련해 의문을 가졌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

지 등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한 체포행위라고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한편,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기억을 더듬어 이를 복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 13명 정도 했는데 김어준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지하는 김호중으로 받아적었던 것”이라며 “이후 단장이 김어준 이름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며 취재기자의 질문

김문수·나경원·안철수 등 8명 국힘 1차 경선 진출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회의원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후보 신청

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회는 17일에 미디어테이블을 열고, 18일에 후보자 비전대회를 진행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며, A·B 2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하게 된다.

21일과 22일에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주도권 토론과 4인 후보자 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양자 결선을 하지 않고 최종 후보로 확정한다.

30일에는 최종 후보 2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뉴시스

현대전화 안바꿨다→바꿨다

최상목, 위증 사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장관 탄핵 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질의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현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 있다. 그런데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건 맞지만 계엄 이후인지는(인지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핸드폰을 과거의 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이건 분명한 위증이다. 그런데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발언을 수정하고 그 조항을 적용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했지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 나서 (교체했다), 고장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다. 그건 맞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하수시설 무상귀속 실현 촉구

16일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이 제286회 순천시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로 계획된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개발 일정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제출과 인근 마을 민원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의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수처리 시설의 무상 귀속이 개발이익 극대화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통상협상’ 최상목, 내주 美재무 만난다

부총리, G20재무장관 회의 워싱턴·뉴욕 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의 통상협안 관련 회의가 다음주 성사될 전망이다. 글로벌 관세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한미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 방미기간 중 베스트 재무장관과 통상 협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

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베스트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베스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상을 준비해왔다.

베스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인 “지역 목소리 정책 논의에 반영”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각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16일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끌 정책포럼 성장과 통합이 뜻을 올렸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초기 대선용 정책 싱크탱크로 이날 오전 출범했다. 당내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정책 조직과 달리 학자와 전직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 원의 조직이다.

‘이재명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분과위원장을 맡은 문 구청장은 “어깨가 무겁고 영광스럽다”며 “실현

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이 모두 통합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건에 따라 조만간 현장형 정책포럼이자 자문단이 될 광주지역 성장과 통합위원회도 별도로 꾸리게 될 것”이라며 “저의 포럼 참여가 광주와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문 구청장 외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산업자원에너지분과 부위원장)과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AI분과 부위원장), 신우진 전남대 교수(균형발전분과 공동부위원장), 홍성기 목포대 교수(지속가능분과 공동부위원장), 이윤호 순천대 교수(기후위기대응분과 수석공동부위원장)도 포럼에 참여한다.

/김도기 기자

광주 도시가스 신규공급 중단 논란

진보당 “요금 경제성 따져 신규공급 중단”…“지연된 것” 해명

광주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4월부터 신축 건물에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에너지는 공급 중단이 아니라 투자 여력이 떨어져 신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 요금 경제성이 떨어져 4월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해양에너지가 지역민 생존권을 불모로 광주시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2021년 맥쿼리자산운

용이 해양에너지 인수 당시 시민사회는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자본의 이윤을 위한 매물로 거래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맥쿼리 인수 이후 해양에너지는 2022년 195억 7861만원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23년 당기순이익의 1.6배를 초과하는 주주 배당금을 배정해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양에너지는 신규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투자 여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매년 1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접수된 신규 공급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지연된 곳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AI 대표도시·의대신설”…광주·전남 공약발표

광주 찾아 강력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강조

국민의회 21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광주를 방문해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달빛철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진짜 균형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이번 대선의 핵심 기조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간직한 도시이자 인권

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광주가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시대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불리는 달빛철도 조기 추진과 송정역~광주역을 잇는 광주선을 지하화하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남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용

합 K-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27년 개장하는 복합쇼펍을 교통대책으로 도시철도망 확장 BRT 도입, 모빌리티·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 조성,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등도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집약된 땅인 만큼, 전남을 국가 성장판으로 만들겠다”며 “외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공백과 응급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기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2023년 제정…오는 5월31일 유효기간 종료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6가지(법안)가 의결됐다”며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년 한시로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부로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